

Contents

- 01 권두언
서민물가의 현황과 해결과제
- 03 이달의 논단
- 물가(物價)의 봄을 기다리며
- 소비자물가지수의 이해
- 물가상승요인을 고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물가관리
- 09 자치단체 탐방
지역의 물가안정 대책 : 강원도
- 11 자치단체 우수사례
경남 거창군의 「매력있는 창조 거창」
- 13 도시통계
지역 물가통계와 관련 정보서비스의 동향
- 16 연구원동정
4월 연구원 소식

KRILA_2011

2011년 4월호

제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21호
발행인 한표환
편집인 뉴스레터 위원회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락처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디자인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e-mail :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에서 Newsletter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민물가의 현황과 해결과제

작년 구제역이 농민의 주름살을 늘게 하더니 새해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이다. 통계청 발표 2월 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 올라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11.1%)와 경유(14.6%)가격이 신선식품 물가 상승(25.2%)과 함께 서민경제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3월 27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1당 평균 판매가격은 1954.48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강남, 종로, 여의도 등 주요 주유소에서는 휘발류가 리터당 2,200원-2,3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핸드폰 등의 통신요금도 서민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요금은 가구당 13만4천원, 이중 이동통신요금이 약 9만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수준은 분당 0.144달러로 OECD 가입 15개국 중 가장 비싸다. 미국은 0.05달러, 호주 0.117달러, 프랑스 0.12달러 등이며 평균은 0.102달러이다. 식료품비의 인상도 예사롭지 않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한봉지가 1,120원에서 1,128원으로 올랐으며, 우유 값도 2,150원에서 2,480원으로 올랐다. 식료품비 인상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국제 공물가격의 인상이라고 한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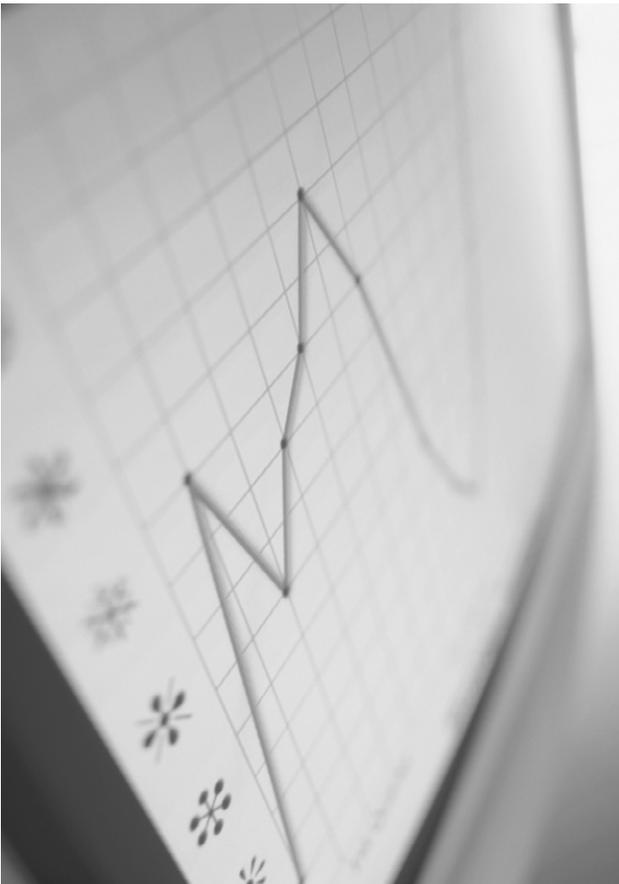
다. 작년 12월 국제 밀 선물가격은 전년 평균가 대비 42.6%, 옥수수가격은 57.1%, 대두는 28%, 설탕은 73.6%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본적인 곡물가격의 인상과 더불어서 3월 3째 주 서민물가를 보면 지난 주에 비하여 무가 1,106원에서 1,274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파는 4,483원에서 4,803원으로, 바나나는 2,191원에서 2,353원으로, 돼지고기는 9,756원에서 10,311원으로, 쇠고기는 4,400, 8,9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지방물가도 만만치 않다. 충청남도의 경우, 2월 소비자물가(489개 품목)는 전월 대비 0.9%, 전년 동기대비 4.5%(전국 4.4%) 상승해 지난 1월(전년 동기대비 4.2%)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은 구제역과 이상기후로 삼겹살 12.5~20%, 돼지갈비 11.1~22.1%, 된장찌개백반 20.0% 등 음식가격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해 전년 동기대비 4.3%(전국 4.1%)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율을 5%, 물가상승률을 3%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도 정부와 비슷한 전망들을 내놓

고 있다. 경제성장은 높게, 물가는 낮게 라는 이른바, “고성장과 저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이다. 따라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낮은 물가를 유지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 역시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경제가 6%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서민층의 체감 경기가 낮았던 것은 서민물가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면상으로 2010년 소비자 물가는 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경제성장율에 비하여 낮아서 물가 불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졌는데, 실제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선식품의 값은 21.3% 인상되어 1994년 23.8%가 인상된 이후, 16년만에 최고의 인상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4월 중순 이후 한파와 구제역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농축수산물 공급이 개선돼 가격안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최근 농축수산물의 도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4월 중순 이후 봄 배추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배추값도 평년가격으로 다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태도 원양어업 쿼터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오징어도 포클랜드 수역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어 수확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아울러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동안 법규위반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을 폐기하지 않고 상표·라벨을 제거 후,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 양여했던 세관 압수물품이나 정부불용품물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국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서민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대기업 등에서는 서민경제를 해치는 가격 담합행위 등을 삼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 등의 배려와 더불어 일반국민들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따뜻하게 돌보며 더불어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달의 논단 _ ①

물가(物價)의 봄을 기다리며



김동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겨울이 깊어지면 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인자상정(人之常情)이지만, 금년 처럼 간절해 본 적은 드문 것 같다. 지난 연말부터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기도 했지만, 강추위와 함께 기승을 부린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과 이와 더불어 연일 치솟는 물가

로 인해 이번 겨울은 더욱 혹독하게 여겨졌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아직까지도 길고 힘든 겨울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며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종의 지방공공요금과 48종의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지방공공요금에 들쭉이기 시작했다.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등 원가 상승과 장기간의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인한 재정부담 과중 등으로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상을 막아야 했다.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민관합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정부의 물가안정화 노력에 동참토록 하였다. 그대로 인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직접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악화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협조하여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지방물가안정 민관합동 자문위원회 사진

그러나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안도도 잠시, 이번에는 개인서비스요금이 문제되기 시작했다. 중동의 주요산유국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폭등, 구제역과 한파로 인한 축산물과 채소류 수급불안은 각종 에너지비용과 식자재가격 등의 상승으로 이어져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외식비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요금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즉, 직접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없어도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것만으로 실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부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 지방물가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요금 정보 공개,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한 모니터링강화 등 개인서비스요금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비스 관련 업체들이 동반하거나 편승하여 가격인상을 추구할 경우 이러한 정책들은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한 물가상승 분위기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한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제과업, 프랜차이즈업, 학원업 등 직능단체대표들과 주부들을 만나 물가안정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도시가스요금체계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순회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들은 정부부처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의 물가위기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지혜를 발휘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서비스업계는 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가격인상은 매출감소로 이어져 결국은 공급자나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또 다른 분야의 가격인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특히, 담합이나 편승·동반 인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들은 절약을 생활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소비는 최대한 자제하고, 각종 가격정보를 비교하여 구매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정착시키고 부수적으로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일본의 대지진 피해와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군사행동 개시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불안 등 물가상승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



〈충청권 - "3.15(화)"〉



〈영남권 - "3.16(수)"〉



〈영남권 - "3.16(수)"〉



〈호남권 - "3.22(화)"〉



〈수도권 - "3.23(수)"〉



〈수도권 - "3.23(수)"〉

권역별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사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의 물가위기 또한 국민 모두의 슬기를 모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남녘으로부터 봄꽃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그 봄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먼저 찾아온다. 물가도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아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달의 논단 _ ②

소비자물가지수의 이해



양동희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201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비 0.5%, 전년 동월비 4.7% 상승하여 3개월 연속적으로 4%대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물가 동향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전세, 외식 등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작년과 비교하여 기상조건 악화, 구제역 파동 등으로 농축수산물

이 14.9% 올랐으며,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석유류가 15.3% 상승했는데 특히 휘발유 지수는 136.2를 기록하여 기존의 최고치인 2008년 7월 135.7을 경신했다. 또한, 전세난 등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이 가파르며,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에 따른 음식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외식 삼겹살, 탕수육 등 외식품목들도 많이 올랐다. 외식품목은 500원 또는 1,000원 단위로 인상되어 물가압력이 상당히 높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화정책의 준칙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경우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물가상승률이 20%라고 하면 과거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1,200원을 주고 구매해야 하므로 화폐 소유자인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 또한 각종 연금도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위와 같이 소비자물가지수가 국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므로 신뢰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대체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보다 낮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매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37개 도시의 약 23,000개 사업체에서 48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된 가격은 산술 평균하여 평균가격을 구한 다음 2005년 연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조사도시의 품목별 지수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2005년 서울에서 조사된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000원이었고, 2011년 3월의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900원이라면 2011년 3월의 휘발유의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는 190.0이 된다. 이와 같이 작성된 도시의 품목별 지수는 37개 도시 간 가중치와, 489개 품목 간 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전(全)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한다.

이처럼 조사품목과 품목별가중치를 특정 기준시점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시점 고정 가중산술평균 방식(라스파이레스산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수 작성방법 중에서 작성방법이 쉽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라스파이레스 산식은 과거시점(0, 5자년)의 소비 지출 구조 등에 근거했기 때문에 현실 반영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1996년 「보스킨 보고서」에 의하면 상향편의 발생요인으로 대체편의, 할인점편의, 품질변화편의, 신상품편의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상향편의를 축소하기 위하여 할인점 및 인터넷 거래가격 반영, 헤도닉 품질조정 기법 적용 등의 다양한 개선책을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상향편의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보다 낮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일까? 이는 아래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89개 품목을 품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것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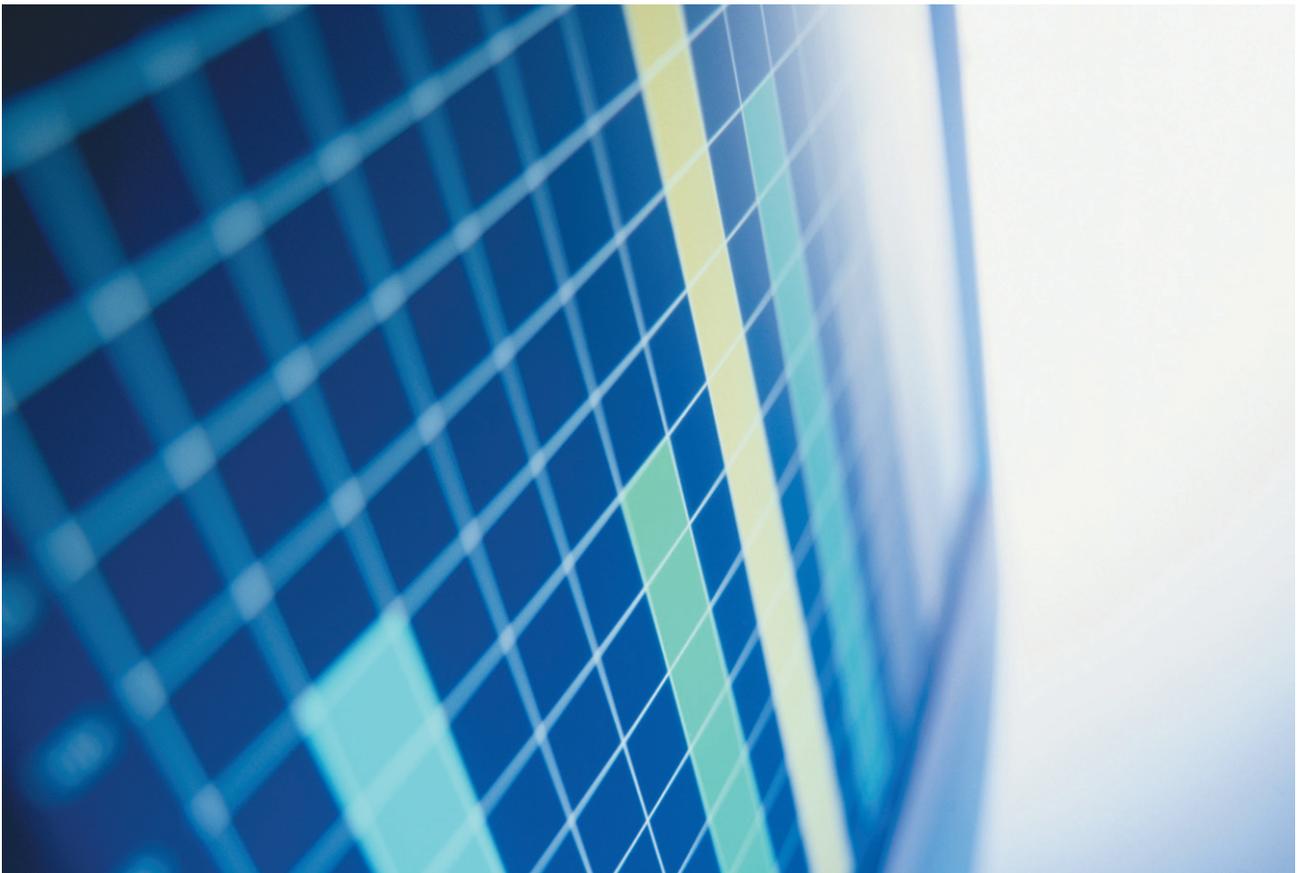
자기와 관련 있는 품목의 상승률을 단순히 산술평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양배추 100.0%, 상추 50.0%, 돼지고기는 10.0% 오른 반면, 휘발유는 5.0% 하락한 경우, 채식주의자라면 돼지고기를 제외한 품목의 등락율을 산술평균하여 48.3% 올랐다고 느끼기 쉬우나, 통계청에서는 각 품목의 가중치가 양배추 0.1, 상추 0.4, 돼지고기 7.5, 휘발유가 31.2인 것을 고려하여 오히려 1.3% 하락하였다고 공표한다.

둘째, 통계청에서 증감률을 발표할 때는 한 달 전 또는 1년 전과 같이 정해진 시점과 비교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해당 품목이 가장 싼 때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예로 들면, 2009년 10월 102.0, 2009년 12월 59.7, 2010년 10월 368.7을 기록하였다. 통계청에서는 2010년 10월 배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68.7로 2009년 10월 102.0과 비교하여 1년 전에 비하여 261.5% 올랐다고 발표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1년 동안 가장 싼 2009년 12월 59.7과 비교하여 517.6% 올랐다고 느낀다.

셋째, 통계청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따질 때 동질동량의 가격변동을 산정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소비량의 증가, 또는 품질상승에 따른 가격상승분까지도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489개 품목별 지수와 함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와 같은 특수 분류지수를 편제, 공표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t.kr>)에 오시면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며 다양한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소비지출 구조, 인구 수, 상권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지수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소비자물가지수가 꽤 신뢰성 있는 통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통계청도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달의 논단 _ ③

물가상승요인을 고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물가관리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이상 한파와 국제 역 대란, 국제 원유, 곡물 및 원자재가 상승, 그리고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한 물가의 변동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2011년 2월 총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생활물가지수는 5.2%, 신선식품지수는 25.2%,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폭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총공급과 총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가 기존 물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됨으로써 초과공급으로 인한 재고의 발생과 생산량의 감축 등 국민소득이 변화하는 불균형상태가 과생되었다.

지역의 물가는 지역 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변동된다. 즉, 물가의 변동은 공급측의 생산이나 수요측면의 소비, 투자 등 지역경제활동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최근 지역 물가의 상승은 지역 경제의 총지출곡선을 하향감소를 유발시켜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명목자산의 실질가치를 감소시켜 소비가 감소하는 실질자산효과를 유발시킨다. 반면 이에 대한 상쇄작용으로 지역 기업들은 생산을 증가시키려하지만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공급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생산량의 증가는 노동자의 초과수요를 유발하여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함께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반면 현행 체계 하에서의 물가지수는 제한된 품목과 지역에 대하여 국한된 물가지수를 제공하고 있어 물가 변동의 정도를 상세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행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물가를 파악하기 위한 물가지수는 생산자 측면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측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요금의 변동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상품으로 인해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출입물가지수, 그리고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농가지수 및 구입가격지수가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의 공표범위는 38개 시와 16개 도에 국한되어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 제외한 모든 물가지수는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공표되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의 변동은 파악할 수 있으나 전체 품목에 대한 지역별 물가의 실효성있는 변동 파악이 불가능하며 지역간 비교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또한 물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 품목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품목별 및 지역별 물가관리에 대한 통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물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물가관리는 기재부에서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국가 물가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석유, 전기, 가스료는 지경부, 등록금 및 학원비는 교과부, 보험료는 금감위, 농축산물은 농림부, 의약품 및 의료비는 보건부, 통신요금은 방통위, 지자체 관련 공공요금 5종, 개인서비스요금 8종에 대해서는 행안부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다.

반면, 물가의 상승 요인에 대한 고려 및 관리는 품목별 또는 지자체별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획일화된 정책으로 지역의 물가 안정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물가관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공공요금의 인상폭의 인하 및 동결로 일관하고 있어, 대외적인 정세 변화에 부합되어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원인 추적을 제외한 물가관리 정책의 고착화는 현재의 식료품 물가 상승으

로 인해 발생한 물가의 상승에서 원유가격의 상승압력, 해외 상품가격 압력으로 인해 증가한 원자재 대외 의존도와 같이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제한된 지역에 대한 물가공표, 품목별 제한, 지역별 획일화된 물가관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으로 최근 물가안정체계 확립,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내실화,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물가 감시활동 강화, 대시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 48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2차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11종), 개인서비스요금(48종), 주요 생활물가(52종) 등을 대상으로 물가정보를 가격으로 공개하는 물가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노력이 시

도되고 있다.

그러나 2차 지방물가 안전관리방안 외에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분야의 물가동향 파악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부당한 요금인상,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으로 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기적인 방안과 제한된 품목과 지역에 대한 물가관리의 철저한 현황파악으로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에서의 물가의 변동을 야기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물가 안정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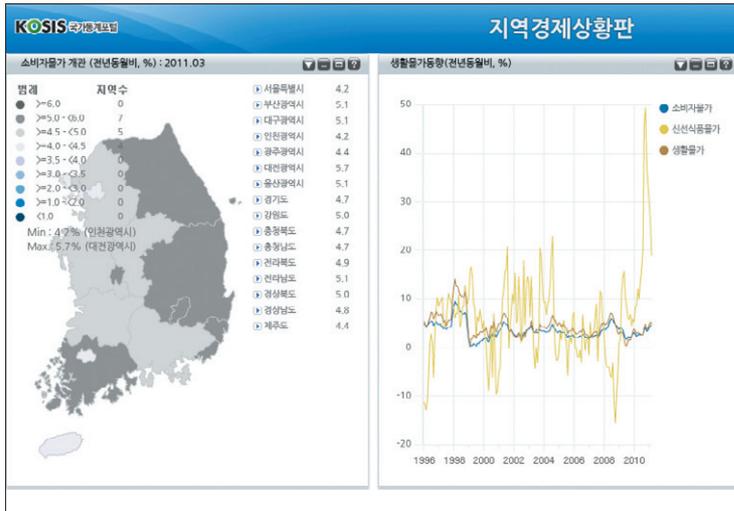
도시통계

지역 물가통계와 관련 정보서비스의 동향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물가(GPL: General Price Level)**란 개별 상품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하며, **물가지수(PI: Price Index)**는 이러한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을 의미
 -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이나 경기판단 등 경제동향을 분석하거나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지표로 활용
 - 과거에는 도매물가지수 및 소매물가지수 등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 의해 전국 37개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한국은행에 의해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의 3종이 공식통계로 공표
- **생산자 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는 과거 도매물가지수의 의미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시장에서 1차적으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 801개 및 서비스 83개 등 총 884개 품목조사의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의미하며,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품목의 가격변동을 파악하여 국내물가에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지표
 - 두 물가지수는 모두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며, 국가단위의 통계로서 지역통계를 제시하지 않음
- 과거 소매물가지수와 같이 소비자의 구매가격, 즉 소비자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
 - 통계청은 전국 통합 창원시를 포함한 38개 도시에서 489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구입가격을 조사하여 2005년의 값을 100으로 기준한 지수형태로 작성 및 공표하며, 보조지표로서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 물가), 신선식품지수가 있음
 -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 152개의 품목(쌀, 달걀, 배추, 소주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 신선식품지수란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류, 어패류, 과일류와 같은 품목 51개를 집계한 지수로서, 가격변동률이 계절적 요인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심하게 나타나는 신선식품을 별도로 지수로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계절적·기상적 불규칙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을 별도로 봄과 동시에 각 가정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 이성과 같이 3종의 물가지수 중 지역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기타 지역별 물가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와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 **통계청 KOSIS(www.kosis.kr)의 “지역경제 상황판”**
 - 통계청에서 지역통계 서비스의 강화 차원에서 최근 구축한 “지역경제 상황판”에는 광공업생산, 소비자물가, 고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 시·도별 경제상황을 제시
 - 소비자물가동향을 클릭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물론, 보조지표인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물가지수의 변동추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시도별 전년 동월대비 금년 해당월의 물가지수의 상승률에 따라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게 함

• 통계청 KOSIS(www.kosis.kr)의 “시도통계”의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청에서 지역통계 서비스로 시도 통계, 시군구 통계, 읍면동 통계가 존재하며 그중 소비자물가지수는 38개 도시지역에서 측정되므로 시도통계에서 조회 가능
- 지수측정이 처음 시도된 1985년 1월 이후 월별 전체 및 기본분류¹⁾· 주요상품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물가지수 등의 보조지표, 16개 시도 및 38개 측정도시별로 확인할 수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의 동향(2011. 3월 기준): 201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2005년=100)로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4.7% 상승하여 2011년 1월의 4.1% 상승 이후 3개월 연속 4%대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및 품목별 동향(2011. 3월 기준): 전월과 비교하여 교통부문은 유류가 상승으로 2.1% 상승, 가구집기·가사용품부문은 보육시설이용료 상승 등으로 1.4% 상승, 기타잡비 부문은 금반지, 미용료 상승 등으로 1.3% 상승, 주거 및 수도·광열부문은 등유, 전세가 상승 등으로 0.4% 상승 등, 하기된 표는 2011년 3월의 주요 등락품목임

연번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
농축수산물	팥고추(32.4), 쌀(2.5), 배추(6.3), 열무(10.0), 닭고기(7.5),	돼지고기(31.7), 마늘(78.0), 배추(34.0), 파(63.6),
	굴(5.2), 토마토(3.3), 돼지고기(-6.1), 파(-13.2), 시금치(-35.7),	고춧가루(24.4), 사과(25.8), 배(30.0), 쌀(4.6),
	생화(-18.8), 딸기(-9.8), 쇠고기(국산:-2.8), 부추(-29.3)	쇠고기(국산:-9.2), 팥고추(-22.5), 오이(-22.4)
공업제품	휘발유(4.1), 경유(5.6), 금반지(4.1), 등유(5.8), 햄(9.5),	휘발유(13.8), 금반지(25.2), 경유(18.9), 등유(24.9),
	교과서(고등학교:35.1), 건강기능식품(-3.3)	LPG(자동차용:8.4)
집세	전세(0.7), 월세(0.3)	전세(3.7), 월세(2.1)
공공서비스	납입금(고등학교:-17.3)	도시가스(5.5), 납입금(고등학교:-17.3), 이동전화통화료(-1.6)
개인서비스	보육시설이용료(4.1), 납입금(사립대학교(2.4), 납입금(유치원:2.8),	삼겹살(외식:12.8), 돼지갈비(외식:11.9), 미용료(7.1),
	보습학원비(2.5), 학교급식비(-17.9), 공동주택관리비(-1.1)	단체여행비(해외:13.1), 보육시설이용료(4.2), 공동주택관리비(3.5), 학교급식비:-21.3)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역별 동향(2011. 3월 기준): 16개 광역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은, 대구, 강원 등 4개 시도는 전 도시 평균(0.5%)보다 높게 0.7~0.8%씩 상승하였고,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는 0.1~0.5%씩 상승하였으며, 제주는 0.2% 하락

1)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복·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가사용품, 보건의료, 교통, 통신, 교양·오락, 교육, 외식·숙박, 기타잡비의 12개 분류

(2005년 지수를 100으로 한 경우, %)

지역명	소비자 물가지수 (2005=100)	등락률(%)			지역명	소비자 물가지수 (2005=100)	등락률(%)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동기비 (1-3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동기비 (1-3월)
전도시	120.4	0.5	4.7	4.5	충남	120.9	0.2	4.7	4.5
서울	119.3	0.4	4.2	4.0	(천안)	120.8	0.2	4.6	4.4
부산	121.3	0.4	5.1	5.0	(보령)	120.6	0.1	4.5	4.7
대구	120.2	0.8	5.1	4.6	(서산)	121.3	0.3	4.9	4.8
인천	120.2	0.3	4.2	4.3	전북	121.2	0.2	4.9	5.0
광주	120.1	0.5	4.4	4.4	(전주)	121.4	0.2	4.9	4.9
대전	121.1	0.7	5.7	5.1	(군산)	121.0	0.5	5.0	5.0
울산	122.1	0.7	5.1	5.0	(남원)	121.0	0.0	5.2	5.4
경기	120.8	0.5	4.7	4.3	전남	121.1	0.3	5.1	4.9
(수원)	122.0	0.7	4.9	4.4	(목포)	120.7	0.1	4.4	4.5
(성남)	120.4	0.6	4.6	4.0	(여수)	120.4	0.5	5.5	5.3
(의정부)	121.6	0.2	4.8	4.8	(순천)	122.0	0.2	5.1	4.8
(안양)	120.3	0.5	4.6	4.3	경북	121.4	0.5	5.0	4.9
(부천)	119.6	0.4	4.4	4.1	(포항)	120.8	0.4	4.4	4.3
(안산)	120.9	0.4	4.6	4.2	(경주)	121.5	0.7	5.0	4.7
(고양)	120.6	0.4	4.7	4.5	(안동)	121.1	0.6	5.6	5.5
강원	120.4	0.8	5.0	4.6	(구미)	122.3	0.7	5.7	5.5
(춘천)	120.8	0.8	5.3	4.9	경남	121.3	0.5	4.8	4.8
(원주)	119.9	0.8	5.1	4.8	(창원)	121.3	0.7	5.1	4.9
(강릉)	120.6	0.6	4.5	4.3	(진주)	120.5	0.6	4.5	4.4
충북	120.8	0.1	4.7	4.7	(김해)	122.0	0.2	4.5	4.8
(청주)	120.7	0.1	4.7	4.7	제주도	119.3	-0.2	4.4	4.7
(충주)	121.1	0.2	4.8	4.6	(제주)	119.4	-0.2	4.3	4.6
					(서귀포)	118.8	-0.1	4.6	4.8

- 행정안전부는 2011년초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차원에서 **지역별 · 품목별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공시할 수 있도록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추진
 - 행정안전부는 총 59종(공공요금 11종, 개인서비스 48종 중 외식비 26종, 기타서비스 22종)을 자치단체의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동 품목의 지역가격을 시스템에 공시하여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유도
 -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은 올해 8월경 구축될 예정이며, 각 자치단체의 물가정보 홈페이지는 3월 현재 자치단체별로 서비스를 개시하였거나 개시하기 직전인 상태
 - 중앙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자치단체의 물가정보시스템이나 한국소비자원의 “T-gate” (www.tgate.or.kr) 및 “T-price” (price.tgate.or.kr/price2/)를 통해 지역별 · 품목별 지방 공공요금 및 지역별 개인서비스에 관한 통계자료 구득이 가능

- 경상남도 물가정보시스템의 예시화면



- T-price의 “가격통계 정보”의 예시화면





연구원동정

4월 연구원 소식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일시: 2011. 3. 24(목)
- 참석: 한표환 원장, 김현호 지역발전연구실장
- 장소: 부산발전연구원

▣ KRILA 자치포럼 개최 (제3차)

- 일시: 2011. 4. 27(수) 15:00~17:00
- 강연: 장세화 (中 장춘 한국학연구소장 前길림대 교수)
- 주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 2011 지방재정세미나 참석

- 일시: 2011. 4. 21(목)~22(금)
- 참석: 한표환 원장, 서정섭 지방재정연구실장,
김대영 지방세계연구센터소장, 조기현 연구위원
- 장소: 전라남도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 KRIIA 교육연수

제1기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교육

- 장소: 연구원 지하1층 강의실
- 일시: 4.13(수)~4.15(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제1기 지역공공디자인 교육

- 장소: 연구원 지하1층 강의실
- 일시: 4.20(수)~4.22(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